

Global Goings-on

미 국

소득불평등(Inequality in America)

1. 최근에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사회계층이동성(social mobility)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식의 소득 수준을 비교·분석한 세대간 이동성에서 미국은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스웨덴, 독일, 스페인, 프랑스보다 낮았음.
 - 미국은 부모가 소득수준 5분위 중 최하위 소득층(1분위)일 때, 자식도 1분위에 머무를 확률이 40%이상이었음. 덴마크는 이 확률이 25% 미만이었고, 영국은 30%미만이었음.
2. 미국의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사회이동성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첫째, 부유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도 많고, 교육, 영양, 건강 등에 있어

서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반면,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부모는 자식의 개발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힘들.

- 둘째, 미국 정부 정책도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적합하지 않음. 부시대통령이 부유한 계층에 대해 세금감면정책을 벌이고 있고, 부유하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못하고 있음.

출처: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7년 7월 17일자

<http://www.ihrt.com/articles/2007/07/16/opinion/edinequal.php>

아시아

소득불평등(China's prosperity brings income gap)

1.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개

발도상국들의 빈부간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번에 조사한 22개국 대부분에서 지난 10년간의 지니계수로 측정한 상대적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질소득차를 반영한 절대적 불평등도도 증가했음.

- 특히, 중국과 네팔은 지니계수가 가장 커서 소득불평등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렇게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일본, 한국, 대만 등 앞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에서 소득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되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임.

3. 보고서는 이들 개발도상국에서 세계화의 영향이 무역이 용이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연안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간 경제발전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따라서 소득의 불평등은 일정 정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지적.

4. 하지만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국가의 사회응집력 등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져온다며, 각 정부는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본접근성(access to capital)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FINANCIAL TIMES 2007년 8월 9일자
<http://www.ft.com/cms/s/9ebb585a-4610-11dc-b359-0000779fd2ac.html>

경제성장과 불평등(Inequality Check)

1.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최근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아시아 국가들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은 “불평등이 심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인 아시아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2.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8월 21일, 아시아에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지 부자가 가난한 자의 몫까지 빼앗기 때문은 아니며, 소득의 증가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함.

- 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소득수준 5분위 중 최하위 소득층(1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경우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이 1993년에서 2004년 사이 한해 평균 8.75%씩 감소하였음.

-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평균기대수명이 1960년의 42.6세에서 2005년 57세로 늘어났음.

3.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은 경제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기회의 불평등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함.

- 카스트제도나 부패한 정부 등은 '구조적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이들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2007년 8월 21일
http://online.wsj.com/article/SB118764421298303303.html?mod=todays_us_opinion

영 국

지역간 경제격차(North-south divide will narrow but not rich-poor gap, says report)

1. 영국의 지역간 경제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북부지역에는 제조업이 성행하고 남부지역에는 서비스업이 발달했던 전통적 지역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더 많은 수의 기업이 지나치게 분주한 남동부 지역과 런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하지만 지역간 격차의 전반적인 완화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장 가난한 지역간 경제격차는 오히려 커질 것으로 예상됨.

- Deloitte and Touche의 경제수석고문인 Roger Bootle은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가장 부유한 런던 및 남동부지역과 가장 가난한 미들랜드, 북동부, 웨일스 지역의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함.

- Roger Bootle에 따르면, 부유한 남동부 지역에서 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GDP의 1/3이 안되지만 가난한 웨일스 지역의 경우 정부지출이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한 긴축재정의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미들랜드, 북동부, 웨일스 등 가난한 지역은 부유한 지역과 비교해 제조업의 쇠퇴에 지나치게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그러나 Roger Bootle은 이렇게 경제파이 재분배 효과가 크지 못해서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장 가난한 지역간 격차가 커지더라도, 경제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고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힘.

출처: THE GUARDIAN 2007년 7월 23일자
<http://society.guardian.co.uk/socialexclusion/story/0,,2132725,00.html>

보건의료 정보시스템(Getting better)

1. 영국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의 핵심이라는 취지 아래 환자가 직접 의사를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인 “Choose and Book”을 2005년 시작하였음. 그러나 이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의 Choose and Book 이용률(referral 기준) 목표치는 90%였지만, 실제 이용률은 40% 수준에 지나지 않았음. 이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 그러나 Choose and Book 시스템의 더 큰 문제는 환자에게 서비스 선택의 기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임.

- 대개의 전문의는 시술 성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성과측정 방법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많음.

3.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작년 심장질환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생존율 데이터를 공개한 바 있고, 심장질환 이외의 분야에서도 생존율 및 다른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NHS Choices”라는 웹사이트를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정부는 2008년 4월까지 모든 전문의의 시술에 대한 정보를 이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코노미스트지는 의료시술에 대한 정보 공개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지만, 소비자가 자신이 받을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함.

출처: THE ECONOMIST 2007년 8월 30일
http://www.economist.com/world/britain/displaystory.cfm?story_id=9726716

유럽연합

심각한 남녀 임금격차(EU-wide gender pay gap 'absurd')

1.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수요 일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는 평균 15%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5년의 17%에 비해 아주 조금 개선된 것임.
 - 남녀 임금격차는 키프로스(Cyprus)와 에스토니아(Estonia)가 각각 25%로 가장 컸고, 독일의 경우 1995년보다 증가한 22%였음. 영국은 10년 전 26%보다 감소한 22%였음.
2.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집안일과 가족 부양 등 무보수 노동을 많이 하고, 파트타임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음. 여성이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커리어에 중단이 많기 때문에 남녀 임금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함.
 - 비슷한 자격과 경력을 요하는 일이라도 여성의 노동력이 주가 되는 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녀 임금격차의 폭은 나이와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30세

미만에서는 남녀 임금차이가 7% 정도지만, 50~59세 연령대에서는 30% 이상으로 커졌음. 또, 한 회사에서 5년 미만 종사할 경우 남녀 임금격차가 22% 정도지만, 30년 이상 종사할 경우 32% 까지 증가하였음.

3. 유럽연합 고용위원회장 Vladimir Spidla은 학교에서 여학생의 성취도가 더 높고,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의 최종학력도 여성이 더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임금격차가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
 - Vladimir Spidla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강력한 성차별금지법 시행이 필요하며, 고용주들은 남녀의 동등한 임금제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남녀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쓰일 수 있도록 '유럽연합 사회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함.

출처: FINANCIAL TIMES 2007년 7월 19일자
<http://www.ft.com/cms/s/e1a69ba4-3551-11dc-bb16-0000779fd2ac.html>

일 본

인구변화(Cloud, or silver linings?)

1. 일본사회는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
 -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 정도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약 20%에 이릅니다. 2015년경에는 이 연령대의 비율이 25%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평균기대수명도 1947년의 50세에서 지금은 82세로 크게 증가했음.
2.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전체인구도 급감하고 있음.
 - 1970년대 초반부터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수준인 2.1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6년에는 1.32명으로 낮아짐.
 - 2005년 통계를 보면, 평균기대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음.
3. 인구가 고령화되고 수적으로도 감소하면서 퇴직한 노인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음.
 - 203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21세기 중반쯤에는 이 비율이 3대 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4.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퇴직시스템을 개혁해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연령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인구변화의 속도를 반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함.
 - 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임.

출처: THE ECONOMIST 2007년 7월 26일
http://www.economist.com/world/displaystory.cfm?story_id=9539825

여성의 직장에서의 승진 한계(Japan's glass ceiling held firmly in place)

1. 일본의 고용 문화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갖는 것을 사실상 힘들게 하고 있음.
2. 1985년 “고용기회균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이 통과된 이래 여성의 고용기회는 늘어났지만 높은

- 자리로의 승진에는 여전히 차별이 심각함.
- 여성이 관리자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6.6%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2005년에는 10.1%에 지나지 않았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2005년 여성이 전체관리자급의 42.5%를 차지하였음.
 - 일본은 부유한 국가 중 경제 및 정치 참여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 뽑힌 바 있음.

3. 위와 같은 직접적인 차별 이외에도 일본 여성의 승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 지나치게 긴 근무시간을 요구하는 기업 문화도 이런 요인 중 하나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아이를 갖기 시작한 여성이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관리자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내조를 한다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직장에서 여성의 승진을 막는 요소 중 하나임.

4. 한편, 여성권리옹호론자들은 일본의 출산율 감소가 여성의 고용불평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인구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도 고용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여러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직장이 있는 여성이 직장을 떠나는 여성보다 아이를 일찍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출처: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7년 8월 6일자

<http://www.ihrt.com/articles/2007/08/06/asia/06equal.php> 